

## 대구 10월항쟁유족회와 과거청산 운동

김상숙\*

1946년 10월 항쟁은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 토지개혁 지연, 잘못된 식량정책과 민생정책, 좌익세력 탄압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바라보는 쪽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 왔다. '10월항쟁유족회'는 '10월항쟁'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항쟁의 역사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법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다른 유족회가 외면한 '미신청 유족(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해 조사를 받지 못한 유족)'들을 포용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산 후 한국사회의 과거청산 운동이 정체된 상황에서, 10월항쟁 유족회는 이처럼 새로운 유족회 운동의 선두에 서서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0월항쟁유족회의 결성과정과 활동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과거청산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 | 주제어 |

1946년 10월항쟁,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과거청산, 유족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구

\* 단국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며

1946년 10월 항쟁은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 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항쟁은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발생해 경북 전역으로 퍼졌고 12월 중순까지 전국 73개 시군으로 파급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나 3.1운동에 버금갈 정도로 대규모로 일어났다. 1946년 10월 항쟁은 바라보는 쪽의 관점에 따라 ‘대구폭동’, ‘10·1사건’, ‘10·1소요’, ‘10월인민항쟁’, ‘추수봉기’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미군정 관계자들은 대체로 ‘소요’로, 우익진영은 ‘폭동’으로, 좌익진영에서는 ‘항쟁’으로 표현하는 등 그 입장이 나누어져 있었다.

필자는 1946년 10월 항쟁의 성격을 규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1946년 10월 항쟁은 일제강점기까지 민중들 사이에 반제, 반봉건의 요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 해방 → 해방 직후 자주적인 건국운동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 → 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나타난 미완의 시민혁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1946년 10월 항쟁은 제주4·3항쟁, 여순항쟁과 함께 민간인 학살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1946년 10월 항쟁 후 군경의 진압에 맞서 형성된 야산대·유격대와 군경 간의 지역 내전은 한국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 반 이승만 세력의 제거하기 위한 민간인 학살이 1946년~1954년까지 계속되었다. 셋째, 1946년 10월 항쟁을 계기로 우익세력은 말단 하부조직을 만들고 정비하면서 마을공동체 단위까지 국가권력 이식하고 지방권력을 재편하는 한편, 반공=빨갱이 혐오의 사회심리구조를 형성했다. 이는 전후 냉전 통치성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1946년 10월 항쟁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는 항쟁, 내전, 학살의 측면이 복합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과거청산 운동 또는 과거사(過去事)정리 운동 과정에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나 관심사에 따라 사건 진상규명을 할 때 초점을 두는 측면이 달라질 수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항쟁 당시의 상황과 함께 항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에 초점을 두어 왔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항쟁 정신의 계승에 관심을 두어 왔다. 그리고 내전과 학살의 구체적 실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했다. 반면 유족들은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로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법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두며 활동해왔다. 그 과정에 항쟁과 내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이는 여순항쟁과 제주4·3항쟁에 대한 접근방식과 대비된다.<sup>1)</sup> 1946년 10월 항쟁의 실체에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시공간적 범주를 좀 더 확장하여 고찰하고 사건의 복합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10월 항쟁’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걸어 항쟁의 역사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법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의 10월항쟁유족회는 지역사회 안에서도, 유족집단 안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표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항쟁과 학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여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실화해위가 정의 내린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월 28일 수복 이전까지 약 2년여 동안 전라남도도와 전라북도·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희생 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진실화해위, 2010c: 70)으로 이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위) 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과거청산 운동이 정체된 상황에서 국가와 기존 유족회가 외면한 ‘미신청 유족(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해 조사를 받지 못한 유족)’들을 포용하여 새로운 유족회 운동의 선두에 서서 활동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10월항쟁유족회의 결성과정과 활동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의 현주소와 과거청산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유족회 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보아 4.19 시기 피학살자유족회 운동 등 1960년대까지의 운동을 다룬 것과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운동을 다룬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정호기(2006; 2010)의 연구는 전남지역 유족회와 여순사건유족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유족회 간의 연대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이 과정에 유족회 운동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하고 있다. 노용석(2007)은 청도유족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유족들이 민간인 희생자를 양민-비양민(빨갱이)을 구분하고 비양민을 피하는 역사 인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현재 과거청산 운동에 한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동진(2013)은 10월항쟁유족회의 활동을 포함한 대구 지역사회의 ‘10·1사건’ 기억운동을 분석하면서 학습을 통한 기억의 확장을 통해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산영(2010)은 청도·경산지역 유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인 학살사건 및 유족회 운동에 대한 유족의 인식과 대응을 연구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유족회 운동은 진실화해위 해산을 기점으로 그 과제와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고, 진실화해위 해산 이전의 운동을 1기 유족회 운동, 진실화해위 해산 이후의 운동을 2기 유족회 운동으로 나누어 10월항쟁유족회 활동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리고 선행연구와 문헌 자료들을 참고하되 유족회 회원들의 면접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II. 10월항쟁유족회의 결성과 활동

### 1. 10월항쟁유족회의 결성

#### 1) 10월항쟁유족회 이전의 지역유족회 활동과 시민사회단체의 ‘10월 항쟁’ 추모행사

대구지역에 10월항쟁유족회 이전에 있었던 유족회로는 1960년 4·19 시기에 결성된 경북지구 피학살자유족회 및 대구유족회가 있었다. 이 유족회는 1946년 10월 항쟁 당시 사회운동가이자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족인 이원식이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1946년 10월 항쟁 희생자 박상희(박정희의 형)의 부인인 조귀분도 간부로 활동했으므로 1946년 10월 항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조직이었다. 전국 피학살자유족회 운동의 핵심으로 활동하던 이 유족회는 5·16쿠데타 직후 극심한 탄압을 받고 활동의 맥이 끊겼다(이광달 면접자료, 2015/08/27).

1999년 AP통신에 의한 노근리 사건 보도 이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이 재개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유족회가 결성되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유족회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2000년 1월에 경산코발트 유족회가 결성되었다. 2000년 7월에는 대구유족회가 결성되었다(오마이뉴스, 2000/07/11). 11월에는 청도유족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 회원 및 학계 인사들이 모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대구·경북 공동조사단’ 발족식을 가졌다(오마이뉴스, 2000/11/02). 그런데 이들 조직은 주로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사

건들을 중심으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사고했으며, 1946년 10월 항쟁을 항쟁의 측면에서든, 학살의 측면에서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다.

1946년 10월 항쟁 기념 및 추모 행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10월 1일, 사회운동가인 이일재(1923년 출생, 1946년 10월 항쟁 당시 화학노조 서기)와 유족 나정태(1947년 출생)가 만나 중앙공원 고목에 술잔을 올리는 형태로 조출하게 시작했다(나정태 면접자료, 2015/08/12). 2006년부터는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10월 항쟁' 추모제가 대구에서 공식적으로 거행되었다. 이 해는 1946년 10월 항쟁 60주년이 되는 해로 대구·경북민중연대와 통일연대 등 38개 단체가 참가한 '10월 항쟁 60주년 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최초로 '10월 항쟁 추모제'가 개최되었다(인터넷 평화뉴스, 2006/06/26). 2007년에는 경상감영공원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주관하는 '10월 항쟁 61주년 정신 계승 추모제'를 거행했다. 2008년에는 대구·경북진보연대(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4·9인혁재단(준비위원회)이 주관하여 경상감영공원에서 '10월 항쟁 62주년 정신 계승추모제'가 개최되었다. 2009년에는 '10월 항쟁 63주기 및 대경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가 가톨릭근로사회관에서 개최되었다(이동진, 2013: 27).

## 2) 10월항쟁유족회 핵심 구성원들의 초기 만남

기존 유족회와 달리 1946년 10월 항쟁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했던 10월항쟁유족회 결성 움직임은 나중에 유족회의 핵심 구성원이 된 채영희(1945년 출생)와 나정태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정태는 1946년 10월 항쟁 당시 철도노조원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나운상의 아들로 1999년부터 민간인 학살 문제에 관심을 두고 대구유족회 회장인 이복녕을 만나 대

구유족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01년부터는 경산코발트사건 유족들과도 교류했다. 당시 대구유족회는 회장과 집행위원장 외에 총무가 있었으며, 최찬, 권대각, 김현규 등 4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 이영기가 유족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나정태는 2002년부터는 경산코발트유족회에서 활동하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 촉구 운동 등 전국 단위로 전개된 유족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나정태 면접자료, 2015/08/12). 채영희는 항일운동가 채충식의 손녀이자 1946년 10월 항쟁 시기에 활동한 사회운동가 채병기의 딸로, 일찍부터 이일재와 같은 지역의 원로 운동가들 사이에 ‘10월 항쟁 유족’으로 알려져 있었다. 채영희는 2005년부터 경산코발트유족회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와 별도로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까지 진실화해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채영희 면접자료, 2015/08/12). 이를 보면, 과거 해방정국에서 이념적으로 좀 더 선구적이었던 ‘활동가형 희생자’의 유족들은 2000년대 들어 진행되고 있던 과거청산 운동이나 유족회 운동을 ‘양민 희생자’의 운동으로 여겼고 자신은 국가를 상대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족회 측에서도 이들과 거리를 두고 - 심지어 유족회 회원으로 가입해 있음에도 - 진실화해위 활동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 두 사람은 2007년 경산코발트광산 현장 답사를 하면서 만나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유족과 달리 자신들의 부친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아닌 1946년 10월 항쟁 때문에 돌아가신 것으로 인지하면서, 1946년 10월 항쟁을 가족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6·25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개가하고 큰집에서 섬유 공장에 다니면서 자랐어요. 어느 날, 일하고 돌아와 큰집 마루에서 자는데 어른들이 “자 아버지는 10·1 빨개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든 든할 텐데”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소리가 평생 안 잊히는 기라. 그래서 나는 2000년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10·1사건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족회 들어와서 10월에서 보도연맹으로 역사가 연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나정태 면접자료, 2015/08/12).

어릴 때 할아버지와 고모가 귓속말로 나누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10월이란 게 있고 그 때문에 아버지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항쟁의 내막은 몰랐지요. 아버지가 끌려가 행방불명되고 맨날 형사들이 집에 찾아와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기에, 아버지가 나쁜 일 하실 분이 아니다 싶으면서도 국가와 민족에게 굉장히 못 할 짓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친구 이일재 선생님께서 10월 현장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었고 10월 항쟁은 나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채영희 면접자료, 2015/08/12).

한편, 2007년 12월부터 진실화해위에서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이하 대구10월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채영희는 2008년 7월에 진실화해위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채영희는 진실화해위 조사받을 당시만 해도 자신의 부친 채병기가 1946년 10월 항쟁 시에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참고인 진술조사 과정에 1950년 6.25 직후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된 것이 밝혀졌다. 당시 유족들은 1946년 10월 항쟁과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분리하여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무고한 ‘양민’이 학살된 사건으로 인식하는 반면 1946년 10월 항쟁은 ‘좌익’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희생자가 국민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1946년 10월 항쟁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를 부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나정태와 채영희는 자신들의 부친이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학살되었음에도, 어릴 때부터 1946년 10월 항쟁을 중심으로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후 채영희와 나정태는 2008년 여름부터 2009년 겨울까지 진실화해위에서 ‘대구10월사건’ 관련으로 조사 중이던 유족들과 모임을 하게 되었다. 이 유족들 가운데에는 칠곡지역 거주자가 많았으므로 이 모임은 한동안 ‘칠곡유족회’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의 ‘칠곡유족회’ 유족 중에는 1946년 10월 항쟁을 ‘좌익 폭동’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았으므로, 채영희와 나정태를 ‘강성’으로 보면서 겁을 내기도 하였다(채영희 면접자료, 2015/08/12).

10월이 그렇게 겁이 나는 사건이었나?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자손이 어디 갔겠노? 그런데 10월 유족은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예. 유족회 나오는 분들도 그냥 보도연맹 이 카다가 10월 이야기만 나오면 멈칫하면서 겁을 냈어요(채영희 면접자료, 2015/08/12).

이 10월을 원체 제가 왈왈거리니까 우리 유족들은 욕 안 얻어먹을라고 받아들이지. 저거끼리는 돌아서서 아직도 겁을 내고. 다른 유족회 회장들도 이미 결정문 받고 보상까지 받았는데도 10월항쟁 유족회 위령제 가면 섬뜩섬뜩하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없어질지. 저는 그게 한입니다. 10월을 제대로 알고 역사를 제대로 알면 자기들도 겁날 게 없지 않겠어요?(나정태 면접자료, 2015/08/12)

이처럼, 보수적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946년 10월 항쟁의 역사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생각을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비

상한 결의가 있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유족들 사이에서도 1946년 10월 항쟁을 어떤 사건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회·정치적인 의식과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 3) 4·9계승사업회의 지원과 유족회 결성

유족회는 계, 동우회 등과 같은 친목 모임과는 달리 결성하기 위해서는 조직화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구심점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전국 각 지역의 유족회는 유족의 힘만으로 결성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진실화해위 결성 이전에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진상조사 활동이 유족회 결성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결성된 유관 유족회, 시민단체, 연구자단체, 언론 등이 지원하여 하나의 유족회가 결성되었다(정호기, 2006: 51~52).

10월항쟁유족회의 경우, 초기에는 진실화해위에서 조사받던 '대구10월사건' 유족들이 교류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유족회가 본격적으로 결성되는 과정에는 지역 시민단체인 4·9계승사업회의 지원이 있었다. 채영희와 나정태 두 사람은 이일재의 권고로 4·9계승사업회와 연결되었으며, 2008년 10월 1일 10월 항쟁 기념행사 후 4·9계승사업회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10월항쟁유족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그들은 그 후 3개월간 매주 1회 정도 함종호(4·9계승사업회 활동가), 이향(이복녕의 딸) 등과 함께 금성출판사에서 간행한 한국사 교과서를 교재로 하여 한국 현대사에 대해 학습하였다. 2009년 봄까지 학습 소모임을 진행한 뒤에는 거의 매달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이 함께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 무렵 채영희는 개인 재산을 털어 나정태와 함께 대구뿐 아니라 경주와 영천 등에 거주하는 유족들도 찾아다니면서 유족회 회원을 모으려고 애썼다(나정태 면접자료, 2015/08/12).

결국, 그들은 계승사업회의 도움을 받아 2009년 12월 4일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대구10월항쟁유족회 결성식을 올리고 4·9계승사업회 사무실에 입주하였다. 당시 회원은 채영희, 나정태, 이향 외에 칠곡 유족인 정도곤, 이상수, 대구 유족인 최찬 등 20명 정도가 있었다. 이날의 결성 소식은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다음은 당시 발표되었던 결성선언문이다.

### 10월항쟁유족회 결성선언문

1946년 10월 항쟁은 터무니없이 좌익폭동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당시 항쟁은 미군정의 잘못된 식량정책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폭등하여, 대구를 비롯한 도시에서는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고, 농촌에서는 식량을 강제로 수집하여 농민의 원성을 사고, 항의하는 농민들을 친일경찰과 관료들을 내세워 탄압하는 등 미군정 통치의 총체적 난맥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정신대 보내고, 징용 보내고, 일상적 폭력을 가하고 재산을 탈취했던 친일경찰과 관료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미군정의 힘을 업고 다시 등장하여 쌀의 수집과 배급과정에 개입하여 국민들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10월 항쟁은 특별한 정치세력의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군정의 식량정책 실패, 토지 개혁의 지연, 친일경찰의 재등용과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즉 미군정의 실정에 대한 저항권적 운동입니다.

그러나 항쟁의 원인을 제공한 미군정은 적반하장 격으로 항쟁에 참가한 순수한 국민들을 모두 폭도나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항쟁의 원인을 미리 살피거나 항쟁 과정에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탄압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국민이 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해 저항권적 행위를 하는 것은 기본 권리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10월 항쟁을 민주주의운동, 생존권적 운동, 애국운동으로 복권시켜야 합니다.

더욱 슬픈 것은 10월 항쟁에 참여하였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미군정과 친일경찰에 '찍혀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학살당하였습니다.

10월 항쟁 때 생존권을 위해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의 지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예비검속하여 빨갱이로 몰아 재판절차도, 본인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부리는 바로 10월 항쟁입니다. 10월 항쟁 참가자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하고 마침내 전쟁 때 학살된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 부리인 10월 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하나. 우리 10월항쟁유족회는 10월 항쟁이 좌익폭동이라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운동, 생존권적 운동, 애국운동이었음을 밝히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 10월항쟁유족회는 10월 항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

고 이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학살된 가족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을 위해 '10월 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10월항쟁유족회는 역사의 정기를 바로 세우려 하는 경북·대구 지역의 모든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10월 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북·대구 시·도민 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하나. 우리 10월항쟁유족회는 전국의 100만 유족과 연대한다!

2009년 12월 4일

10월항쟁유족회 회원 일동

자료: 10월항쟁유족회 홈페이지

## 2.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활동: 국가의 진실규명과 배상 보상 소송

### 1) 진실화해위의 '대구10월사건' 진상규명

2010년 3월 30일, 진실화해위는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여 1946년 10월 항쟁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전까지 희생된 희생자 60명의 신원과 희생 경위를 밝혔다.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위령·추모사업의 지원, 관련 역사기록 수정, 군경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첨부 자료에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대구10월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희생된 40명의 신원과 희생 경위도 밝혀 이후의 명예회복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했다(진실화해위, 2010a: 55~154).

진실화해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1946년 10월 항쟁과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의 실재를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또한 그간 학계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부 사실을 새로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46년 10월 항쟁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로는 커밍스(Cummings)의 연구(1981; 국역 1986)와 정해구의 저작(1988), 언론인 정

영진의 저작(1990)과 사료 모음집인 심지연의 저작(1991)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학계 연구는 폭동이나, 항쟁이나 등 사건 성격 규명에 초점을 두면서 항쟁의 배경과 원인, 경과 등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군경의 진압에 따른 민간인 희생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특히 당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그 수는 각종 자료에서 시·군별 추정치로는 밝히고 있으나 개인별 신원은 유명 인사(박상희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운동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로 문서자료에 의거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사건의 내면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진실화해위의 조사는 1946년 10월 항쟁 자체보다는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의 실체 및 희생자들의 피해 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학계 연구보다는 조사의 시간적 범위가 넓은 편이다. 또한, 국가기관 자료와 미군 문서 자료 외에도 참고인 128명에 대한 진술조사와 현장조사를 기초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통해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경찰 발포로 살해되어 시신시위의 주인공이 되었던 노동자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당시 발포현장에 있었던 경찰의 증언뿐 아니라 토벌에 참여했던 경찰과 우익단체원들의 증언을 받아내었다. 그리고 1946년 10월 항쟁을 1946년 10월의 일회성 항쟁이 아니라 이후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보면서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상을 일부라도 밝혀내었다(김상숙, 2010: 18). 그러나 진실화해위의 조사는 국가기관이 가진 공식성 때문에 항쟁의 의미를 명확하게 서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그 조사범위도 진실화해위에 신청된 사건을 중심으로 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등 일부만 다뤘으며 특히 영천지역을 집중하여 조사한 결과라는 한계도 있다. 또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점을 두다 보니 1946년 10월 항쟁의 실상과 배경, 항쟁의 영향 등을 상세히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김상숙, 2010: 19).

진실화해위의 '대구10월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관련하여 10월항쟁유족회 회원들은 2010년 3월 4일에 대거 상경하여 진실화해위에 상임위원 김용직을 상대로 항의 방문을 하였다. '대구10월사건'은 유족 방문 후 3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사건의 성격을 수정하여 기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재를 늦춰 6월 말에야 결정 통지문이 유족에게 전달되었다.

## 2) 진실규명 결정 이후의 활동

'대구10월사건'은 진실화해위에 신청한 사람이 6명으로 신청인보다 미신청인의 진실규명 결정률이 높은 사건이다. 이 미신청 유족들은 담당 조사관이 미군 문서, 경찰서 생산자료, 국회 생산 자료 등 국가기관의 기록을 토대로 탐문조사를 하고 참고인 진술을 받아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진실화해위, 2010a: 55~64).

2010년 여름 결정서를 받을 무렵 10월항쟁유족회의 회원은 20여 명 정도였다. 그러나 결정서를 받은 뒤에도 유족회에 새로운 회원이 늘지 않았다. 그래서 유족회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미신청 유족들의 명단과 주소록을 진실화해위 측에서 입수하여 그들에게 연락하면서 새로운 유족들, 신규회원을 찾는 일에 나섰다. 그러나 자신이 자발적으로 진실화해위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조사관의 열의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미신청 유족 중 일부는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거부하기도 하고 유족회 활동에도 부정적이었다.

유족들에게 매일 전화 20통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정도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거절했어요. 제가 전화 하면 굉장히 욕을 먹었어예. “이런 년이 다 있노?” “빨갱이는 니 혼자 해라.” “당신이 고생하는 거는 알지만 두

번 다시 그런 데 가기 싫다. 아직도 몸서리쳐진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어예. 결정서에 확실하게 나온 사람도 그러더라 고요. 대구 10월 항쟁 현장에서 죽은 사람도 많은데 유족회 식구가 적어도 100명은 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가족이 한 명도 안 나타나지 않았어요.(채영희 면접자료, 2015/08/12).

이 무렵 유족들의 반응은 냉랭한 대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는 조금 더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결성 직후부터 카페를 개설하고 4·9계승사업회와 10월문화회 등과 교류하며 시민사회와의 연대하면서 지역사회에 10월 항쟁의 진상 알리고자 애썼다. 2010년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10월항쟁유족회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추모제를 거행할 수 있게 되었다.<sup>2)</sup> 2010년의 추모제 행사는 10월 1일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화합의 광장에서 10월 항쟁과 대구·군위·경주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100여 명의 신위를 모시고 거행하였다. 주최 단체에는 10월항쟁유족회 외에 민주노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진보연대,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참가했다. 후원단체로 진실화해위, 대구시, 경찰청, 전국유족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한국민속문화삼족오협회 등이 있었다.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인사의 공식적인 참가는 없었다. 2011년에는 대구YMCA회관에서 ‘10월 항쟁 65주년 추모제 및 염무웅 선생 강연회’를 개최했다. 주최 단체에는 10월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구·경북추모연대준비위가 추가되었고, 후원단체에는 대구·경북유족회가 추가되었다. 2012년에는 10월 5일에는 10월항쟁유족회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최로 2·28기념공원에서 ‘66주기 10월 항쟁 정신계승 및 희생자 추모제와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동진,

2) 2011년의 경우를 보면, 10월항쟁유족회는 ‘대구10월사건’ 희생자 위령제 명목으로 대구시 지방자치과로부터 150만 원을 지원 받았다(대구광역시, 2011: 이동진, 2013, 33에서 재인용).

2013: 31~32).

그런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활발한 교류가 유족회 활동에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전투주의적 성향이나 실용적이지 못한 일 처리방식, 문화적 폐쇄성 때문에 초창기에 드러나던 유족회 회원들이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유족회 간부들 역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유족회 운동을 유족의 아픔을 해결하는 운동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운동의 수단으로 보기도 하고 유족을 주체적 단위로 보지 않고 하부조직이나 동원대상으로 여기는 데 불만을 느끼기도 했다.

한편, ‘대구10월사건’ 관련 유족들의 배·보상 소송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었다. 우선 김갑상, 방종한, 박영명, 이원달, 조원해 등 신청인 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원해를 제외한 4명은 승소하였다. 이 중 박영명은 초기에 칠곡유족회와 결합하여 활동했으나 나머지 신청 유족들은 10월항쟁유족회와 결합하여 활동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칠곡의 미신청 진실규명 유족인 정도곤, 이상수, 이점환, 이수진 등 네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진실화해위 신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다(뉴시스, 2015/04/17) ‘대구10월사건’ 관련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영천지역의 미신청 진실규명 유족들은 영천유족회에서 가입하여 별도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 유족들은 영천유족회를 통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대법원에서 진실화해위 신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반면, 10월항쟁유족회에서 활동하던 미신청 진실규명 유족 중 채영희, 유병화, 박태자, 권혁제, 권순철 등의 회원들은 특별법 제정 방식이 아닌 개별소송에 의한 국가의 배·보상과 명예회복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가, 소송시효가 만료되지 직전인 2013년 3월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1심, 2심에서 승소했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였다(대법원 201다204076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 2015/05/14).

‘대구10월사건’ 유족들이 국가 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진실 화해위 진실규명 이후 다시 한 번 국가가 공식적으로 대구10·1폭동이 아닌 ‘대구10월사건’을 인정하고 이 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사건의 실재를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승소한 유족들은 대부분 1946년 10월 항쟁 관련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뒤 6.25 발발 후 학살된 희생자들의 유족으로, 진실화해위의 ‘대구10월사건’ 결정서에는 희생거명자로 분류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이는 최근, 진실화해위 신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수의 유족이 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청 희생거명자도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Ⅲ. 2014년 12월 유족회 재구성과 그 이후의 주요활동

#### 1. 유족회의 재구성: 제2기 미신청 유족 중심으로 조직 전환

진실화해위는 법으로 정해진 신청 기간(1년)과 조사 기간(4년)이 짧았고, 홍보 부족, 신고주의의 구조적 한계 등의 이유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사가 미비했다. 그래서 미처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유족이 많다. 보수적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유족들이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유족회 활동도 활발하지 못해 신청인이 적었다. 일례로 2006년 11월 30일 기준 진실화해위 접수창구별 신청서 접수결과를 보면, 총 10,860건 중 전라남도는 2,590건(23.8%)인데 비해 경상북도는 537건(4.9%), 대구광역시 193건(1.9%)에 불과했다(진실화해위, 2010b: 70).

10월항쟁유족회는 2014년 가을에는 가창지역 상원리 유해 발굴을

시도하면서 가창지역 전수조사 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2014년 10월 22일 공영방송(대구KBS, “시선 오늘을 보다”)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보도되면서 10월항쟁유족회로 과거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했던 유족들의 문의가 쇄도하게 되었다. 대체로 대구와 가창, 청도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 더구나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국가배상소송까지 끝난 유족들로 구성된 다른 유족회들은 미신청 유족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10월항쟁유족회로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10월항쟁유족회 간부들은 초기에는 그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주저하였다. 유족회 간부들의 부담이 너무 컸으며, 현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방침을 볼 때 미신청 유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미신청 유족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결정한 바탕에는 일단 유족회 회원이 많이 있어야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유족회 간부들이 미신청 유족들에게서 같은 유족으로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기 때문이다.

유족회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여러 가지로 출혈이 너무 크고, 지치기도 했고. 또 일해 놓으면, 어떤 사람은 “회장이 뭘 바라고 저렇게 설치노.” 라고 말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지금 상태의 유족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키울 것인가. 그런데 유족들이 제가 경영하는 식당\*10월항쟁유족회 사무실이 있음에 수시로 찾아옵니다. 찾아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 역시도 누군가 한 사람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버지에 대한 거나 역사에 대한 것을 모르고 지냈던 그 세월을 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도 길잡이가 없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예.(채영희 면접자)

료, 2015/08/12)

미신청 유족들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시 회원 수가 20명 정도로 늘어나자 10월항쟁유족회는 2014년 12월 10일 총회를 열어 단체의 이름을 '10월 항쟁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유족회'로 변경했다. 그리고 임원진도 그 이전에는 회장(채영희)과 총무(박종경)만 있던 구조를 새로이 확대 개편하면서 새로이 정비했다. 이날 총회에 대한 채영희 회장의 메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12월 20일에는 절대적으로 미신고자가 많고 앞서간 유족이 이끌고 밀고 하여 특별법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하기를 결심하면서 유족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회칙 개정을 했고 임원 개편을 했습니다.

임원으로는 고문 함중호, 자문위원 나정태·고희림, 감사 김익현·권순철, 운영위원 청도 조정제·임복식, 회장 채영희, 부회장 김영호, 사무국장 추종만, 총무 박종경, 조직국장 김주환. 이상 12인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12월 21일에는 가창수변공원 상원동 골짜기와 코발트광산 학살현장을 찾아서 간단한 제를 올리고 신임 임원진 참배가 있었습니다.

자료: 10월항쟁유족회 제공

이후 10월항쟁유족회는 회원 수가 계속 늘어났다. 2015년 초에는 가창지역에 미신청 유족을 찾는다든 현수막까지 달았는데, 이 현수막을 보고 찾아와 유족회에 가입한 회원도 있다. 2015년 8월 현재 10월항쟁유족회의 회원 수는 40명이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까지이며 70대가 많은 편이다. 희생자의 자녀인 유족 2세대가 대부분이지만, 1세대(주로 희생자의 처)가 생존한 경우도 있다. 연로한 1세대는 2세대에 비해 자녀에게 해가 미칠까 봐 유족회 활동에 조심스럽다.

이처럼 현재 조직구조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운영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은 4~5명 된다. 카페 외에 그룹 카

특방을 운영하면서 카톡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운영위원으로 추대하고 있다. 운영위원들은 카톡방에서 상시 논의하며 수시로 만나서 일상 생활의 여러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 특히 간부들은 남매들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일상적인 우애가 돈독하다.

## 2. 유족회 재구성 이후의 주요 활동

### 1) 가창 상원동 유해 발굴 시도와 가창지역 피해자 전수조사

2014년 가을에서 2015년 초까지 10월항쟁유족회가 가장 집중했던 사업은 가창 상원동 유해 발굴 시도와 지역 전수조사 사업이다. 유해 발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전국 단위의 과거청산 운동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꾸린 ‘한국전쟁기 민간인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에서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 시민 주도의 유해 발굴 사업을 벌이면서 각 지역의 후보지를 물색하는 작업을 하는 것 계기로 대구 시민단체들도 유해 발굴 구성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팀이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지 못하자 유족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유해 발굴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유족회를 재결성하고 난 뒤에는 가창지역 피해자 전수조사를 시도하면서 가창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소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창 상원동 중석광산에서 대규모의 학살이 있었다는 증언을 듣게 되었다. 또한, 봉대리 지역에도 학살터가 있다는 증언을 입수했다. 이에 유해 발굴 전문가 노용석을 불러 현지조사를 하고 유족회 회원들이 땅을 파며 발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65년 동안 지형의 변화가 있었고 매장 당시 시신을 깊이 매장하지 않아 유해 유실 가능성이 높아서 유해 발굴 작업은 일단 보류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 조사를 계기로 중요 목격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 2)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유족회가 2015년 3월 이후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다. 유족회를 찾아와 새로이 가입하는 2기 미신청 유족들은 국가가 과거청산 활동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국가에 다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누락된 피해자’로서 국가가 자신들에게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배상의 혜택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망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들에게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며, 이를 위해 유족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작업이 서명운동이다.

미신청 유족을 마냥 모으기만 하는 것보다도 뭔가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 첫째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이 이뤄질 길은 까마득하고. 유족회에 등록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국가가 무작정 인정해주지는 않을 거고. 차선책으로 생각한 것은 일단 국회 사무처에 민원을 한번 넣어보자. 60년대 양민학살 신고해놓은 것이 나중에 하나의 힘이 됐듯이 민원 접수증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특별법이 되더라도 힘이 되지 않을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고 특별법이 되어야 희망이 있지요(나정태 면접자료, 2015/08/12)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2015년 3월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2·28공원에서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 발대식을 했다. 특별법 촉구 서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촉구 서명서**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왜곡하거나 은폐된 진상을 밝혀내고,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함으로써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진선미, 이재오 의원)을 제정을 촉구합니다.

자료: 10월항쟁유족회 제공

이후 10월항쟁유족회는 특별법제정운동에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유족회가 되었다. 유족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서명을 받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가서 서명을 받았다. 특히 몇몇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와 손자들과 합심하여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 유족회 회원들은 자녀나 친구들 앞에서 65년 동안 함구하고 있던 아버지 에 관한 대화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기도 하고 가족애를 다지기도 한다. 그리고 유족회 회원들 간의 동료애를 다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식의 변화와 치유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유족회 회원들이 놀라운 열정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2015년 8월 현재 대구에서는 1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고 대구 이외의 지역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의 각 지역에서 1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운동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3) 위령제와 위령 사업**

10월항쟁유족회는 몇 년 전부터 매년 10월 1일 중앙공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벌이는 추모제 행사와는 별도로 매년 7월 30일 가창댐 수변공원에서 '대구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통합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1950년 7월 30일은 대구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들이 가장 많이 희생된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해 학살지인 가창에서 통합 위령제를 지내는 것이다. 특히 올해 위령제는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유족의 힘으로 지냈는데, 120명 정도의 유족과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다른 지역 유족회에서도 대체로 위령제의 개최하는 것은 행사를 주관한 지역 유족회의 정체성 강화, 지역사회 안에서의 위상 재정립, 회원의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다(정호기, 2006: 63). 막연하게 수동적인 상태에 있던 신입 유족들도 위령제에 한번 나와 보면 달라진다. 그래서 유족회에서는 내년에는 또 다른 기획을 해서 위령제를 키워나가려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추모시설이 건립된 수는 그 지역 진상규명운동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데, 현재 10월항쟁유족회는 대구시를 상대로 가창지역의 학살터에 위령비 건립을 요구 중이다. 이미 울진과 포항 등의 전례가 있으므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말 비참하게 큰 학살터에는 위령비 하나 못 세우고 표지석 하나 안 세우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에”, 소박하게 작은 위령비라도 하나 세워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 4) 미신청 유족의 상담과 자료 축적

10월항쟁유족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채영희 회장의 식당에는 유족들이 종종 찾아온다. 찾아온 유족 중에는 유족회를 처음 접할 뿐 아니라 65년 이상 말 못하고 있던 가족사를 다른 사람 앞에서 처음 털어놓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식당과 유족회 사무실은 일상적인 상담 장소로 활용된다. 10월항쟁유족회에서는 미신청 유족들에게도 인우보증서와 참고인 증언 등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연로한 증언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젠가 제2의 진실화해위에 재개되면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3. 유족회 활동의 치유적 의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10월항쟁유족회는 헌신적 간부진을 중심으로 공동체로서의 통합성을 보인다. 유족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당장은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나 유족회 활동 자체가 구성원들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다음은 구술자들이 유족회 활동의 의미에 대해 구술한 것이다.

저는 애들에게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서명을 받을 때, 그걸(서명지를)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외할아버지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진짜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 줄 몰랐다고 그래요. 친구들도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망설여요. 그래도 읽어보고 하라 그러면 해 줘야지 하면서 서명을 하고 그랬어요(임○○ 면접자료, 2015/07/30).

저는 크면서 보도연맹, 빨갱이 빨갱이 하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불러보지 못했어요. 평소에 살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마음에 떠올리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서명하고 이러면서 아버지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생전에 그런 소리 안 하다가 하려니 잘 안 나오더라 카이께네. 그런데 서명을 받을 때, (서명하는 상대방이) “여 누군데? 누가 해당되는데?”라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 그 말이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움츠리고 못 할 건데. “우리 아버지!” 이래 나오더라고요. 말이(박○○ 면접자료, 2015/07/30).

회장님은 배·보상 다 받았고 일종의 명예회복 했는 택입니다. 그런데 위령탑하고 나머지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왜 우

리는 그걸 협조를 안 할 수 있느냐 이기라. 여기 찾아오면은 콜라한 잔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받을 때는 내가 같은 아픔을 느꼈던 사람이라도 그만치 못 하겠더라 이기라요. 그래서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짜든지 우리 아버지 제사상 놓고 제사 지낼 수 있는 위령탑 세우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지요(김○○ 면접자료, 2015/07/04).

우리 아버지들이 20대에 등골이 서늘하도록 끌려가서 돌아가셨기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사실들이 내 속에 응어리져서 묵혀 있었는데, 같은 동질감을 가진, 같은 시기에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서 고생했던 얘기, 이런 저런 얘기,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고, 내 살아생전에 재판에서 승소해가,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는 10월 항쟁에서 돌아가셨다,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말 못하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마음을 드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채영희 면접자료, 2015/08/12).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데 천장을 보고 있으면, 내일 유족회 뭘 해야 할지. 아니면 글을 어떻게 올려서 저 사람 마음을 돌릴지. 또 그러다 보니 제가 초등학교 4학년도 못 나왔는데 이제 받침 자도 안 틀리게 하려고 신경 쓰고. 69살까지 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날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누가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지요(나정태 면접자료, 2015/08/12).

이처럼 유족회 활동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회적, 치유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구성원의 인식 변화와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과정은 65년 동안 잊어버렸던 아버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다시 살려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즉,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가족애와 동료애뿐 아니라 역사와 사회에 대한 애정을 다시 구축해나가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 Ⅳ. 결론: 10월 항쟁유족회 운동의 특수성과 과거청산 운동의 과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족회 가운데 초기에 결성된 유족회는 시민사회가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을 계기로 하여 시민사회의 지원 속에 결성된 경우가 많다(정호기, 2006). 그러나 진실화해위가 설립된 이후에는 국가의 진상조사가 계기가 되어 결성된 경우가 많다. 10월항쟁유족회 역시 국가의 진상조사를 계기로 구성원들이 결집하였으며, 이후 결성과정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족회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학살사건을 단위로 결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10월항쟁유족회는 학살사건 자체보다는 학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10월 유족회의 핵심 구성원들은 자신의 가족이 실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경우에도 1946년 10월 항쟁이 희생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희생된 가족의 행적을 거부하거나 덮어놓으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유족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계승하려는 활동가형 유족의 성향을 유족회 활동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10월 항쟁 유족이라는 정체성 하에 유족회를 구성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초창기에는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유족들과 갈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들의 이러한 성향에 좀 더 친화적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피해자 중심으로 모인 유족회 운동과 요구나 특수

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족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였다. 이는 유족회 운동의 토대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유족회 활동이 정체되자 양 집단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진실규명 결정 이후 유족회 핵심구성원들은 자주적인 활동을 모색하는 과정에 2기 과거청산 운동을 원하는 미신청 유족들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2기 미신청 유족들은 중단된 과거청산 활동 때문에 국가에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기존 유족회에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태이다. 한국사회 안에서 65년 이상 비국민으로 대우받으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으나, 생계에 파묻혀 사회활동에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경우도 많고 정치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경우도 많다. 그들은 대부분 '누락된 피해자'로서 국가가 자신들에게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배상의 혜택을 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10월항쟁유족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국가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배상 요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활동의 동력을 잃고 미신청 유족을 수용하지 않는 다른 유족회와 달리 10월항쟁유족회는 미신청 유족들을 유족회로 포용하여 함께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미신청 유족들을 위한 증언자료를 축적하는 한편, 위령제 행사 개최, 유해 발굴과 위령 시설 건립 사업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기존의 1기 진실화해위 활동과 연결된 유족운동이 아닌 새로운 2기 유족회 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학살사건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10월항쟁유족회 자체의 통합적 성격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10월항쟁유족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적 간부진을 중심으로 2기 유족들과 특별법 제정운동을 추진하면서 공동체로서의 통합성을 보인다. 이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회적, 치유적 의미 가

지며 인식 변화와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핵심 간부진과 조직의 일반 회원의 인식 차이로 인한 긴장의 소지는 늘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10월항쟁유족회 운동뿐 아니라 대구·경북지역의 과거청산 운동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진은 ‘비양민-지도자’에 대한 기억에 초점을 두는 10월항쟁유족회 활동의 특성이 10월 항쟁에 대한 기억을 확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보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은 (양민형 유족들이) 양민과 비양민을 가르는 경계 너머를 사유할 수 있도록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동진, 2013: 36). 필자 역시 현재의 10월항쟁유족회가 좀 더 굳건하게 조직적 토대를 다지려면 중간 간부진의 성장, 원년 간부진과 중간 간부진의 굳건한 결합, 다양한 사회의식을 가진 구성원들을 폭넓게 포용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일상적 장치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 내 다른 유족회와의 연대와 통합 노력도 좀 더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필자는 과거청산 운동에서 피해자 명예회복 운동과 역사적 진실규명 및 항쟁 계승운동의 차이를 인식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역할 분담 하에 양자의 운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유족회는 그간의 활동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사이에서 겪었던 긴장과 갈등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에 배타적으로 되거나 반대로 종속적으로 될 필요도 없이 동등한 연대의 주체로서 우뚝 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산영(2010).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유족의 인식과 대응: 청도·경산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상숙(2010). “1946년 10월 항쟁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과 진상규명의 과제 -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과를 중심으로”. 『민주연구단체협의회모임 2010 여름 학술대회: 과거사 청산과 지역 시민정치』(2010/08/20).
- 노용석(2007).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의 결성과정과 유족의 역사인식에 대한 연.” 『제노사이드연구』, 제1집.
- 심지연(1991). 『대구10월항쟁연구』. 청계연구소 출판국.
- 이동진(2013). “기억의 ‘10·1사건.’ 『사회와 역사』, 제97집.
- 정영진(1990). 『폭풍의 10월』. 한길사.
- 정해구(1988). 『10월일민항쟁연구』. 열음사.
- 정호기(2006).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결성과 진상규명운동: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 \_\_\_\_\_(2010). “과거의 재조명에서 시민주체의 형성과 연대 그리고 와해 — ‘여순사건’의 의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87집.
- 진실화해위(2010a).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진실화해위.
- \_\_\_\_\_(2010b).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진실화해위.
- \_\_\_\_\_(2010c).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III』. 진실화해위.
- Cumings, Bruce(1986). 『한국전쟁의 기원』. 김주환(역). 일월서각;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기타 자료〉

- 뉴시스(2015).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신청 없었다면 국가배상 인정 안 돼”. 2015/04/17
- 대구광역시(2011).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비 집행 내역」(publicart.daegu.go.kr/UserFiles/File/재정공시/2011/1-3-6.xls).

- 대법원(2015). 201다204076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 2015/05/14
- 오마이뉴스(2000). “양민학살 대구지역 피학살자 유족회 반백 년 만에 결성”.  
2000/07/11
- \_\_\_\_\_(2000). “한국전쟁 양민학살 대경조사단’ 발족식”. 2000/11/02
- 인터넷 평화뉴스(2006). “1945년 10월, 60년 전 대구 그날은”. 2006/06/26
- 10월항쟁유족회 홈페이지: <http://cafe.daum.net/daegu-10-1>(2015/08/25 접속)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jeju43.go.kr/>(2015/08/25 접속)

#### 〈유족 면접자료〉

- 김○○ 면접자료. 2015/07/04
- 나정태 면접자료. 2015/08/12
- 박○○ 면접자료. 2015/07/30
- 이광달 면접자료. 2015/08/27
- 임○○ 면접자료. 2015/07/30
- 채영희 면접자료. 2015/08/12

## Abstract

## Associations of Bereaved Families of the October Uprising in Daegu and the Movement for Transitional Justice (Purge of the Past)

Sang-Sook Kim  
(Dankook University)

The October Uprising of 1946 occurred because civilians and leftist disgruntled the US Military Government policy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pro-Japanese Koreans, wrong-headed policies on food and people's livelihood, delays in land reforms and oppression of leftists, and because they protested to the police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Associations of Bereaved Families of the October Uprising' advocate the name of 'the October Uprising' and actively accommodate the historical character of the uprising. They are leading the social movements to clarify the legal truth and the rehabilitation of victims massacred civilians in Daegu Gyeongbuk. And they embrace the bereaved who can not apply to clarify the legal truth to the TRCK, while the state and other associations ignore them.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TRCK, the movement for transitional justice(purge of the past) has been stagnant. In this situation, 'Associations' has been acting at the forefront of the new bereaved movement. By looking at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activities 'Associa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us of the truth-finding movement about the civilian massacre from 1946 October Uprising to Korea war, and discusses the issues and problems of the movement for transitional justice(purge of the past).

Key Words: 1946 October uprising. Korean War. civilian massacre. transitional justice(purge of the past). Associations of Bereaved Familie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TRCK). Daegu.

〈논문신청일: 2016.4.27. / 논문심사일: 2016.5.13. / 게재확정일: 2016.5.25.〉